

박지원·김홍업 탈락

민주당 '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 확정 ... 대상자 11명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공천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계륜 사무총장, 이용희 의원 등 과거 부정·비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11명의 공천 신청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심위의 공천 기준 확정은 선별 구제를 요청한 통합민주당 지도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데다 공천

배제 인사들의 집단 반발 및 무소속 출마 등이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 이정일 전 의원 등은 억울하다는 반응과 함께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박정철 공심위 홍보 간사는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어 "투표를 통해 찬성 7, 기권 1, 반대 4로 결정됐다"며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권고를 들었으나 최고위는 (공천 기준) 의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일까지 1차 공천심사를 할 생각이며 그 다음 경합지역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지역 예비 후보 배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사와 병행하면서 6일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심위의 공천 기준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선별 구제" 요구를 거부한데다 공천 배제 인사들의 집단 반발 등에 직면하고 있어 상당한 파

장이 예상된다.

당장 당 지도부는 공심위의 공천 기준 확정 발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공천 기준 확정과 공천 심사는 공심위의 전결 사항이라는 점에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은 '공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천 심사 기준을 둘러싼 진통과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부정감시단 발대

4·9총선을 35일 앞둔 5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이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선거부정 감시활동에 자원한 143명의 감시단원들은 광주 시내를 돌며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게 된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친환경농업에도 '전봇대' 많다

직불금 적고 곳곳 규제 ... 전남도 39개 개선 건의

해남 화원에서 저농약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주진배(54)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친환경농업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어렵게 키운 배추를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져가면 벌레 먹었다며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공장에선 값을 후리기 일쑤다. 더욱이 일반 농업과의 소득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 직불금도 생산비 차액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사업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직

원비 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

주씨의 경우처럼 공영도매시장에 내다팔려고 할 경우 대부분의 도매시장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판매장이 없어 일반 농산물과 함께 거래되면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다보니 지난 2006년 서울 가락시장에선 전체 거래량의 4%에 불과한 8만5천톤의 친환경 농산물이 거래되는데 그쳤고, 광주 각화시장도 전체 거래량의 6%만이 친환경 농산물이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일반 농업

생산비 차액의 22% 수준만 보전해 주고 있고, 지급기한은 3년, 지급 한도 면적도 5ha로 제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개선 사업지원도 지구(10ha 이상)당 2~1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친환경쌀 전문도정 시설을 못하게 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규제가 지나친다.

가축 방목사육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어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인증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5일 ▲친환경 농업 직불금 현실화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지원 등 39개 농정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주성기자 jines@kwangju.co.kr

“김성호·이종찬 삼성 돈 받았다”

천주교 사제단 주장 “황영기 차명계좌 관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을 삼성그룹의 로비 대상자로 추가 공개하고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삼성그룹과의 '유착관계'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거나 거절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날 오후 4시 수락산 성당에서 삼성그룹의 현 국면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로비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의 부진을 지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제단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은 평소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현직 신분으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휴가비를 직접 받아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호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평소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장, 삼성증권 사장을

거치면서 재직시 삼성비자금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를 주도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의 수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이들에 대해 “스스로 공직을 거절하거나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를 돕는 결단의 길”이라며 “곧 있을 검찰 간부인사에서도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보직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훌륭한 분들을 임명해 이같은 걱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고위직 가운데 ‘삼성 딱딱’을 받은 명단이 더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단을 최소화 했다”고만 반박해 특정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위원장 전광우 공정위원장 백용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신설된 금융위원장에 전광우 달로이트코리아 회장, 공정거래위원장에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대학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법제처장에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을 대표변호사, 보훈처장에는 김 양 주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가 기용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해 경제살리기와 글로벌코리아라는 방향에 맞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고기는 고혈압에 치명적’ 통념 깬다

전남대 진구복 교수 학술상

육류, 특히 소고기가 고혈압에 치명적이라는 통념을 깨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전남대학교 진구복(45·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논문으로 2008년도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학술상을 수상

했다.

진 교수의 논문 제목은 ‘한우 등심과 우둔에서 추출한 단백질 Myosin B'의 효소적 가수분해물의 단백질 변화와 고혈압 촉진 효소(ACE-Angiotensin-I-Converting Enzyme) 저해 효과다. 진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우 고기를 일정시간 동안 단백질 가수분해효소로 처리했을 때 고혈압 억제



〈진구복 교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고기를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비만, 암에 걸린다”는 육류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다양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육류의 개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00점보다는 100가지를
창기겠습니다!

유종필 후원회

후원방법

후원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2천원, 1천원, 500원, 200원, 100원

후원처: 유종필 후원회 (155-1170) (광주) (062) 220-0180

특별한 목적과 정통성이 검증된 인물

전남대 교수, 변호사, 군수, 교수까지
드러낸 위대한 리더십과 기린
마음으로 나서는 **광주**가 필요합니다!

후보: **하승원**

후원처: 하승원 후보 캠프 (155-1170) (광주) (062) 220-0180